

해양수산업 대도약 힘찬 비상

전북도 733억원 투입... 내수면어업 경쟁력 확보

전북도는 '해양수산업 대도약 실현을 위한 힘찬 비상'을 통해 살기좋은 수산 어촌 건설과 전국 1위에 걸맞은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비 1,012억원이 투자되는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2019년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비로 국비 36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또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430억원이 투자되어 해양레저 관광 1천만 시대를 열어 여기문화 경쟁력 확보와 전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비 920억원을 들여 격포 외항 레저어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수부에서 2019년 국가어

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격포항에 대한 개발계획 우선 검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물고기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에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고,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불업조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100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전라북도 해양수산업 대도약 실현을 위해 102개 사업에 7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교육정책 연구 결과 발표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교육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3일 전북교육연구원 시정각실 및 교육실에서 열린 연차보고회는 지난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관련기사 5면>

與 소속 기초단체장 “김경수 불구속 재판 촉구... 도정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12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당 소속 단체장 152명을 대표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11명은 “이미 특검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을 법정구속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다”고 성토했다.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회견문을 통해 “최근 2년 사이 경남도는 두 차례 도정 공백을 겪었다.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며 “(그러나) 지난해 김 지사가 취임하면서 도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가장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은 경남의 50년 숙원사업”이라며 “모두 도지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며 “민약 그렇게 된다면 350만 경남도민들의 경제와 삶도 다시 불투명해지고 피해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남의 모든 도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경남의 운명을 바꿀 주요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특히 “홍준표 전 경남지사

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정의 중단을 우려한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구속을 면했던 전례도 있다”며 “부디 350만 경남도민을 위해 사법부가 특단의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이번에 결정된 남부내륙철도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도지사 공백 사태는 경북과 경남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나 무산시킬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350만 도민과 함께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을 펼 수 있게 해달라”며 “사법부의 선처가 경남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버튼 ‘톡’ 터치 한번으로 선거정보가 한 눈에 쏙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주농협 본점 등 4곳에 이색선거자판기 설치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조합장선거에 관한 정보 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주농협 본점 등 4곳에 이색적인 선거자판기를 설치하여 화제다.

“자판기”라 불리는 이 장치는 버튼을 누르면 기 입력·내장된 조합장선거에 관한 정보, 위반사례예시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좋은 글귀가

영수증형태의 종이에 인쇄되어 나온다.

현재 전주농협 본점, 군산수협 본점, 북익농협 본점, 남원농협 본점 등 거점 조합 4곳에 설치되어 있고, 선거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이들 조합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주농협을 방문한 조합원 신모(60)씨는 “이런 자판기가 있다는 것

이 신기했고 업무처리 대기 시간동안 선거정보도 얻고 좋은 글도 읽으면서 잠깐 동안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튼튼한 우리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존중... 日 수용해야

이 총리,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조찬 가져
李 “日 기업, 재판 응했으면 결과 수용 마땅”
누카가 “서로 생각 틀린 점 있다”고 짧게 대답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일본이 재판에 응했는데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누카가 회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찬을 하며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총리는 과거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낸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누카가 회장이 한국대법원 판결로 인해 경색된 한일관계를 우려를 표했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또 일본 기업이 재판에 응했으면 이겼든, 졌든 그 결과를 수용해야하는데 졌다고 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의 문제인데 어떻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겠다는 거냐”라고 말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서로 생각이 틀린 점이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또 이날 조찬 자리에서 최근 문화상 국회의장의 ‘아키히토 일왕은 전쟁범죄 주범의 아들’이라고 발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 총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강 의원의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누카가 회장에게 “일본은 천황제국가이니 한국 국민은 일본의 전쟁책임이 천황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 의장이 ‘전쟁의 아들’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일본 국민은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천왕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누카가 회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듣고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조찬은 서로 민감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난국을 잘 풀어나가자는 의지를 도모하는 자리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누카가 회장은 전날 오후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강창일 의원과 만찬을 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누카가 회장의 방한은 한일관계를 풀어나가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뉴시스

靑 “한미, 내년 방위비분담금 현재 수준 유지할 수도 있어”

트럼프 “5억 달러 더 지불하기로 동의” 발언에 진화
협상 당시 1년 연장 가능토록 서면 합의... 1+1 형태

청와대가 13일 내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발언과 관련해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면서 “그런데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

이어 “1+(원 플러스 원) 형태. 그래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는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대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

기 위해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 합의를 거론하면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나의 요구에 동의했다. 그들은 어제 5억 달러(약 6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구체적인 인상액까지 제시, 추가 지불이 확정된 것처럼 주장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